

# 일본 수출규제 등이 한일 산업경쟁력 등 GVC에 미친 영향

-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관한 심층조사 :  
일본의회 의사록 등 일측 기록을 중심으로 -

2023.10.6.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문 준 선

## 목 차

1. 조사배경 .....	1
2.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 경과 .....	2
2-1. 분쟁기 : 2019년 7월 ~ 2020년 7월 .....	2
2-2. 휴전기 : 2020년 6월 ~ 2023년 3월 .....	8
2-3. 원복기 : 2023년 3월 ~ 2023년 6월 .....	10
3. 일본은 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했는가? .....	14
3-1.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	14
3-2. 일본 정부 입장과 상충되는 기록 .....	20
4.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영향은? .....	35
4-1. 한국측 입장 .....	35
4-2. 일본측 입장 .....	36
5. 종합정리 .....	45

## 1. 조사배경

2023년 6월 30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2019년 7월 1일에 발생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 양국간 4년에 걸친 분쟁은 종료되었다.

이 분쟁은 전략물자 수출규제라는 전문적 영역에서의 다툼이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슈, 자위대 초계기 사건, 한일 정보보호협정 연장 이슈 등 외교적 사안과 결합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 분쟁 이후,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받아 와이어링 하네스 수급 차질, 마스크 수급 부족, 중국 요소수 수입중단 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이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에 관한 연구는 충분치 못했다. 우선 분쟁이 현재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또한, 4년여에 걸친 분쟁 과정 중에 생산된 여러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었다는 것도 장애요인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도 국내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일측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관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경과를 분쟁기, 휴

전기, 복원기로 구분하고 관련 국내 자료들을 수집하여 시계열별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일본의회 의사록 등 일측 자료들을 수집하여 일측 당국자의 발언, 관련 발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일본의 수출규제 의도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일측의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자료접근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자료, 일본의 경제산업성 발표자료,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의사록, 양국 언론사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관계부처 등의 1차 자료, 제3국 언론, 학술논문 등 2차 자료를 상당수 확인했으나, 시간 제약으로 인해 이번 조사에는 담지 못했다. 여기에 담긴 자료들은 모두 인터넷 등을 통해 접근할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다. 향후 관련 연구자들을 위하여 각주에 출처를 꼼꼼히 표기하였다. 아무쪼록 이 조사 결과가 후속 관련 연구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2.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 경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 양국간 분쟁은 약 4년간 이어졌다. 동 분쟁의 진행 경과에 따라 3개로 기간을 구분해 본다. 먼저,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한국이 WTO 제소 등 대응조치를 했던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분쟁기(紛爭期)로 규정한다. 이어서 양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일본이 강화된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한국은 이를 수용함과 동시에 소부장 육성 정책을 추진한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를 휴전기(休戰期)로 규정한다. 이후 양국의 리더십이 바뀌고,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양국간 실무협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시행한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를 복원기(復元期)로

명명한다.

총 4년의 기간 중 분쟁기는 1년, 휴전기는 2년 9개월, 복원기는 3개월을 차지한다. 분쟁기 중 화이트리스트 제외, WTO 제소,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종료 통보 등 관련 조치가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약 3개월)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 양국간 충돌, 대화, 협상이 일어난 기간은 6개월 정도(분쟁기 3개월, 복원기 3개월)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3년 6개월 동안, 양국은 상호 간 대화나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각자 국내적인 조치를 시행했으며, 분쟁은 더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동결된 채로 유지되었다.

이 분쟁은 강렬했으나, 양국 간 충돌은 짧았으며, 소멸 역시 매우 빨랐다. 결단에 의해 분쟁은 시작되었고, 리더쉽 교체와 함께 해소되었다. 이는 이 분쟁이 일본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경제나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촉발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 2-1. 분쟁기 : 2019년 7월 ~ 2020년 7월

일본의 조치는 신속했다. 7월 1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했고, 이후 약 3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8.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8.22일 GSOMIA 종료를 결정했으며, 9.11일 WTO 제소를 결정했다. 이후 한국이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WTO 제소절차를 중단하면서 당국간 대화 창구가 열렸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국장급 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철

회되지 않았다. 2020년 6월, 한국의 최후통첩에 일본이 응하지 않자, 한국은 WTO 제소 재개를 결정했고, 이 문제는 국제법률 분쟁으로 넘어갔다.

- 2019년 6월 30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불화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총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7월 4일부터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징용공 소송을 둘러싸고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한 사실상의 맞대응 조치로 발동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은 일련의 수출규제에 대해 한일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관계 하에 수출관리에 임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sup>1)</sup>
-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한일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한민국과 관련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적도 있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첫째,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을 외환법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삭제하기 위한 정령 개정에 대한 의견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 둘째, 7월 4일부터 불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를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수출허가 신청을 요구한다.<sup>2)</sup>
- 2019년 8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

1) <https://www.sankei.com/article/20190630-ZGVQX4JAMVLIHBIPYAQ2KIMELA/>

2) [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 \(METI/経済産業省\) \(ndl.go.jp\)](#)

가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하기 위한 정령 개정이 각의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정에 의해, 대한민국 수출에 대해서는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리스트 규제대상 품목 이외에도 대량살상무기 등이나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화폴리이미드·레지스트·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출심사를 거친 후 정당한 민간거래로 확인된 것은 허가하되, 3개 품목 이외에도우회수출이나 목적외 전용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sup>3)</sup>

- 2019년 8월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 상 ‘가’ 지역에서 신설한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sup>4)</sup>
- 2019년 8월 2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

3)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METI/経済産業省\)](#)

4) [경제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sup>5)</sup>

- 2019년 9월 1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째,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둘째,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하였다 셋째,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sup>6)</sup>
- 2019년 11월 22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sup>7)</sup>

5) [전문]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 대구일보 ([idaegu.com](http://idaegu.com))

6) 경제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http://motie.go.kr))



- 2019년 12월 16일, 한·일 양국은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양국은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양국이 11.22일 발표한 대로,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한일 양국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sup>8)</sup>
- 2019년 12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 규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과 일본의 특정 기업 간 포토레지스트 수출 거래에 한해서 그동안 6개월마다 허가신청 절차를 받도록 했던 조치를 최장 3년간 포괄신청제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동일 기업에 의한 지속적인 거래가 포토레지스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해 포괄적인 거래를 허가한다고 밝혔다.<sup>9)</sup>
- 2020년 3월 10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측은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및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의 개선 및 이행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재래식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 무역안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등 최근 한국의 제도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언급했다.<sup>10)</sup>

7) [2보]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 연합뉴스 (yna.co.kr)

8)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9) 日, 포토레지스트 韓규제 일부 완화...3년간 포괄허가제로 변경(종합2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10)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 2020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긴급 사태임을 감안해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양국간 협력할 분야가 많으니 수출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sup>11)</sup>
- 2020년 6월 2일,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sup>12)</sup>
- 2020년 7월 29일,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되었다. 일본은 6.29에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되었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sup>13)</sup>

11) [산업통상자원부 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http://www.motie.go.kr)

12) [경제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http://www.motie.go.kr)

13)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http://www.motie.go.kr)

## 2-2. 휴전기 : 2020년 6월 ~ 2023년 3월

이 시기에는 양국은 어떠한 대화나 충돌도 없이 각자 국내적인 조치에 집중했다. 특히, 한국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2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소부장특별법, 소부장특별회계,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기술개발 등에 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일어났다. 일측은 개정된 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3개 품목 등에 대한 개별허가를 내렸다. 정부와는 별개로 양국 민간은 상호간, 제3국과의 조달선 재배치를 실시했다.

-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2019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을 목표로 ①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②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③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sup>14)</sup>
- (소부장 2.0 전략 수립) 2020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였다.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토대로,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선제대응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하에 2대 전략과제로 ①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② 첨단산업의 세계공장化 중점 추진을 제시하였다.<sup>15)</sup>

14)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http://www.motie.go.kr)

15)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http://www.motie.go.kr)

- (소부장 특별법 전면 개정) 2020년 4월 1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31 공포, ’20.4.1 시행)이 하위 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되었다. 20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 ’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化하였으며,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부여되었다.<sup>16)</sup>
-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에 소부장R&D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2020년 대비 23% 늘어난 2조 5천억원을 집중투자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 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가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소부장 2.0전략」에 따라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투자(R&D 1조 7,348억원, 실증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 4,379억원, 금융지원 등 3,814억원)하며,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1조3,036억원, (과기부) 2,359억원, (중기부) 1,953억원<sup>17)</sup>
-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2019년 10월 11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14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동 위원회는 정부위원

16)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http://motie.go.kr))

17)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http://motie.go.kr))

15명(위원장: 부총리, 부위원장: 산업부장관)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22년까지 총 10회 개최되었다.<sup>18)</sup>

- (소부장 협력모델 신설)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은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사업화를 밀착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확산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2019년부터 총 64건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7대 분야 64건('19.11월~)에 대해 수요기업 참여를 전제로 공동 R&D·규제특례·세제·금융 등 패키지를 지원한다. 선정된 64건 중 3건은 R&D·사업화를 통해 자립화에 성공하였으며, 4건은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하였고, 57건은 협력모델을 진행 중에 있다. <sup>19)</sup>

### 2-3. 원복기 : 2023년 3월 ~ 2023년 6월

2023년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하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14년만에 재개된 정상회담이었다. 이를 전후로 양국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문제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한 실무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켰다.

2023년 3월 14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9일만인 3월 23일,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였다. 같은 날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였다. 양국은 화이트

18) [위원회소개 > 소부장넷 \(sobujang.net\)](#)

19)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리스트 관련 조치도 속도감있게 이어 나갔다. 4월 24일,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원복시켰고, 이어서 6월 30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개정 정령을 공표했다. 논의를 시작한 이후 109일 만에 모든 조치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4년여에 걸친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 양국 간 분쟁은 끝이 났다.

- 2023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관한 아래 3가지 사항을 발표하였다. 첫째,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이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셋째,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동일한 메시지를 같은 날 발표하였다.
- 2023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 결과를 발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14(화)~16(목),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였고,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

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2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였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3.23일~4.12일)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조치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19.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2023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4.10(월)과 4.12(수)~13(목)에 개최하였고, 4.18(화)~20(목)에도 이어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4.10(월)과 4.12(수)~13(목)에는 영상회의를 통해 상황허가(catch-all)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 운영, 심사 및 사후 이행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4.18(화)~4.20(목)에는 한국에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양측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2023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4.18(화)~4.20(목)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에서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3회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대화에서 한국측은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catch-all) 품목별 심사 및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등 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해 일측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한국측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 시연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측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수출의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양측은 한국에서의 회의에 이어서 일본에서 4.24(월)~4.25(화)에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설명했다.

- 2023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4.28.(금) 17시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양국 정부는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7월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6. 27.(화)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하였고, 이번 개정안은 6. 30.(금) 공포를 거쳐 7. 21.(금)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지난 3.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 14.~16.)·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4. 10.~25.)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3. 23.)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 간 심도 있는 정책 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또는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3. 일본은 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했는가?

#### 3-1.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2019년 6월 30일, 산케이 신문은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단행한다

고 하루 전에 예고하면서 동 조치가 “이른바 징용공 소송을 둘러싸고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한 사실상의 맞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의 이러한 보도와는 달리,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외교 문제와는 무관하며, 보복 조치도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 2023년 3월 9일,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

▶ 기무라 사토시(木村聡) 경제산업성 국장 : 지적하신 2019년에 실시한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는 군사 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수출이라든지, 또는 기술의 이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御指摘ございました二〇一九年に行いました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は、軍事転用の可能性があります貨物の輸出でありますとか、あるいは技術の移転を適切に管理するための措置でございまして、労働者問題とは別の問題でございます。)<sup>20)</sup>

◎ 2023년 5월 3일,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산성 대신 : 바로 이 수출 관리의 운용 재검토, 우선 대전제로서 노동자 문제와는 전혀 다른 수출 관리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린 후에, 또한 이것은 일본국으로서 판단해 나가 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협의를 실시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세 품목에 대해서 당시 원래 이 제품이나 거래 특성상 짧은 납기로 발주되는 것

20) <https://kokkai.ndl.go.jp/txt/121113950X00320230309/146>

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출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했듯이 한국의 수출관리 운용 그리고 체제, 취약성, 이것은 제 3국에 이전이 있는지, 혹은 군사면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러한 운용, 관리면에서의 우려가 있었던 점, 이 때문에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로 했다는 것이 당시의 경위입니다.

(まさにこの輸出管理の運用見直し、まず大前提として、労働者問題は全く別の輸出管理の問題であ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上で、かつ、これは日本国として判断していくものでありますので、何か協議を行うとかそういう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まず冒頭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その上で、今経緯について御説明ありましたけれども、まさにフッ化水素、フッ化ポリイミド、レジストの三品目について、当時、そもそも、この製品や取引の特性から短納期で発注されるものですから、そもそも輸出管理が難しいという、そういう面があります。その上で、御指摘があったように、韓国の輸出管理の運用そして体制、脆弱性、これは第三国に移転があるかどうか、あるいは軍事面に使われる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か、こういった運用、管理面での懸念があったこと、このことから包括許可ではなく個別許可にしたというのが当時の経緯でございます。)21)

이 부분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는 달리 수출규제를 강화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일 측의 설명은 불분명했다. 2019년 7월 1일, 수출규제 발표 당시, 경제산업성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발표했다.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한민국과 관련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적도

---

21) <https://kokkai.ndl.go.jp/txt/121114080X00320230317/8>

있어 엄격한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보도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신뢰 훼손이 어떠한 의미인지, 부적절한 사안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후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일 측의 설명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경상성은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을 수출통제 강화 이유로 추가 설명하였다. 이후 한국은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 무역안보국을 신설하며, 정책대화를 재개하는 등 3가지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갔다.

다만,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는 언론 등에 공개된 바 없다. 2019년 11월 8일, 중의원 상임위에서 경상성 국장이 부적절한 사안은 2018년에 발각된 바 있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후 일본 의회 등에서 명확한 사례를 제시하라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일본

---

22) 한국 측은 2020년 5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일측이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다는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❶ 먼저,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6월 1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❷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6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더욱 강화한 바 있습니다.

❸ 작년 7월 4일부터 일본 정부에 의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체제로 전환된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0개월 이상 실제 운영 과정에서 건전한 수출 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되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대(對) 한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들은 관련 답변을 회피하였다.

◎ 2019년 11월 8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 호사카 신(保坂 伸) 경산성 국장 : 본건의 검토를 개시한 시기라고 생각하므로, 답변을 드리자면, 세 품목에 대해 개별 허가를 요구하기로 한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부적절 사안이 발각되어, 그 이후 사안을 조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서 검토를 개시한 것입니다. 또, 국가 카테고리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의 개최를 향한 움직임이 전망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해, 금년 들어 검토를 개시한 것입니다.

(本件の検討を開始した時期だと思しますので、御答弁させていただきますと、三品目に対して個別許可を求めることとした件につきましては、昨年、不適切事案が発覚をしまして、それ以降事案を調査していく過程で、再発防止策の一環として検討を開始したものでございます。また、国カテゴリーの見直しにつきましては、韓国との輸出管理政策対話の開催に向けた動きが見込まれないことを踏まえまして、ことしに入ってから検討を開始したものでございます。)

◎ 2023년 3월 29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 요네하라 유이치(米山隆一) 의원: 결국 이 규제를 엄격하게 했지만, 특히 한국에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제3국으로의 수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結局、この規制を厳しくしたけれども、特段、韓国から何か問題になるような第三国への輸出は確認さ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よろしいですか。)

▶ 이가리 가츠로우(猪狩克朗) 경산성 국장: 올해 3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한국과의 정책 대화로 국장급, 제가 일본 측 대표로서 한국 측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중 13시간에 걸쳐 한국 측 제도의 개선, 한국은 2019년 7월 당시에는 그들 정부 중 수출관리 담당 부국이 10명 내외인 체제였다, 그것이 2020년 5월에는 30명 체제가 되었다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측 체제가 종전부터 개선되었다는 것을 하나 하나 확인한 바 있습니다.

(今年の三月十四日から十六日の間、韓国との間で政策対話ということで、局長級、私が日本側の代表として韓国側と対話を行いました。その中で、十三時間かけまして、韓国側の制度の改善、韓国は、二〇一九年七月当時は彼らの政府の中で輸出管理の担当部局が十名前後の体制であった、それが、二〇二〇年五月には三十名の体制になったと。このようなことも含めて、韓国側の体制が従前から改善されたということを一つ一つ確認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 요네하라 유이치(米山隆一) 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셨는데, 요점은 뭔가 위반 사례가 있었다든가, 제3국에 뭔가 부당한 수출이 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애초에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전혀 그쪽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한국 체제가 10명에서 30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 다행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그렇게까지 이럴 필요는 있었나요? 그러면 30명으로 늘려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거기는.

(そうすると、今度は、質問にはお答えいただけ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要は、何か違反事例があったとか、第三国へ何か不当な輸出がされたとかということは、そもそも確認すらしていなくて、全然そちらは何の確認もしていなくて、単に韓国の体制が十名から三十名になったから、ああよかった、そういう話なわけですよ。だったら、そこまで、

こんなことをする必要はあったんですか。それなら、三十人に増やして  
くださいよと言えばよ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と思うんですが、そこ  
は。)23)

### 3-2. 일본 정부 입장과 상충되는 기록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주장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2023년 3월, 양국 정상회담 전후로 동 조치를 2019년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원상회복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 일본 입헌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비판이 이어졌다.

일본 야당의 비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먼저, 수출 규제를 단행한 시점과 해제한 시점을 봤을 때, 동 조치가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다. 둘째,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대로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상호간 대화로 풀 수 있었다. 셋째,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한 경제책략(economic strategy)으로서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 2023년 3월 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 히라키 다이사쿠(平木大作) 의원: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징용공 문제 해결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국내 여론도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결의를 보이고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환영

23) <https://kokkai.ndl.go.jp/txt/121104080X00720230329/61>

합니다. (중략) 오늘 좀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이번 보도에 따르면 한 일 양국 정부가 다른 현안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해결을 목표로 2019년 엄격하게 했던 대한 수출관리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이는 이른바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라 한국 측의 이 부적절한 사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 온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이 현재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보복조치는 결국, 그랬던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만, 이에 대해 설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부측 답변 이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끝내고 싶습디다만, 경제안전 보장, 중요성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와 이른바 외교적인 느낌으로 경제적인 것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확실히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今月六日に、韓国政府が元徴用工問題解決策を発表いたしました。厳しい韓国国内の世論もある中で、尹錫悦政権、問題の解決に向けて強い決意を示した、そして大きな一步を踏み出したことは歓迎したいという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今日、ちょっと確認をしておきたいのは、今回、報道によりますと、日韓両国政府が他の懸案も併せた包括的な解決を目指すということで、二〇一九年に厳しくした対韓輸出管理措置を見直すということが言われ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当時、経済産業省は、これはいわゆる政治的な報復措置ではなくて、韓国側のこの不適切な事案になかなか改善が見られないためだということを書いてきたわけであります。改めて、これ現在、状況に改善が見られているのかどうか、報復措置って、結局、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言われてもおかしくない状況なわけですがけれども、このことについて御説明を求めたいと思います。



時間が参りましたので、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が、経済安全保障、重要性は私もよく理解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いわゆるエコノミック・ステートクラフトと、いわゆる外交的な意趣返しで経済的なものを道具に使うというのは下の下の施策だという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ことがないように、しっかり取組いたいただきたい、お願いして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24)

◎ 2023년 3월 29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 요네야마 류이치(米山隆一) 의원: 이것은 겉으로야 어떻게든 시계열을 보면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규제가 이루어졌고, 이번 3월 6일 한국 정부가 해법을 제시함에 따라 해제로 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군요.

(これは、建前はともかくとして、どう見ても、時系列を見ますと、二〇一八年十月に韓国大法院が日本企業に強制徴用被害者への賠償を命じる判決を出したことを契機に規制がなされ、今般三月六日に韓国政府が解決法を提示したことによって解除に向かったと見るしかないんだと思うんですね。)

▶ 요네야마 류이치(米山隆一) 의원: 이것은 이제 더 이상은 입씨름하지 않겠습니다만, 매우 거침없는 답변으로, 추정입니다만, 그것은 이쪽도 대화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정말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라면 서로 대화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에 있었던 것은,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아도 정치적인 문제였던 것이 아닐까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적하

24) <https://kokkai.ndl.go.jp/txt/121113950X00320230309/146>

고 싶습니다.

(これはもうこれ以上は押し問答しないんですけれども、非常に歯切れの悪い答弁で、恐らく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こっちも対話を求めな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としか見れないわけなんです。結局のところ、それは、本当に単に手続上の問題であるなら、お互いに対話で確認すればいいわけなので、背景にあったのは、それはどこからどう見たって、政治的な問題だっ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ねとしか見えないということは御指摘させていただきます。)

- ▶ 요네야마 류이치(米山隆一) 의원: 결국 이걸 다 보고 해결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솔직히 일본으로서 일본의 평가를 낮춘 것 뿐이 아닐까요. 결국 달라진 것은 단순히 한국이 체제를 30명으로 늘렸을 뿐. 수출이 줄어 손해를 본 것은 일본 기업. 한국은 전혀 반도체 생산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은 이것은 정당한 행위다, 정당한 행위라고 말하지만, 누가 어떻게 봤든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에 얽혀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뿐이 아니냐고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結局、これを全部見て、解決したからよかったな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正直、日本として、日本の評価を下げただけじゃないんですかね。結局のところ、変わったのは、単に韓国が体制を三十人に増やしただけ。輸出が減って損をしたのは日本企業。韓国は全然、半導体生産も特段の影響もございませんでした。日本は、皆さんは、これは正当な行為だ、正当な行為だと言いますけれども、誰がどう見たって、単に政治的な問題に絡めてこれを使ったわけですよ。そういうことをする国だと思われただけではないのかと私は言わざるを得ません。)<sup>25)</sup>

25) <https://kokkai.ndl.go.jp/txt/121104080X00720230329/61>

수출규제가 보복조치냐 아니냐, 외교문제이냐 국내적인 조치냐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느냐에 달려있다. 결정 주체의 의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이외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상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관련 기록은 제한적이다. 최고 결정자인 아베 신조 총리는 사후 회고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술하였다. 아베 총리에게 동 조치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아오야마 시게하루(青山繁晴) 자민당 의원은 2023년 3월과 5월에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결정이 있었던 전후 사정을 설명한 바 있다. 극히 제한적인 정보이지만, 당시 상황을 알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는 그의 회고록에서 “2018년 가을, (한국 대법원이)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시키고, 이후 (한국은) 어떠한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가 수출규제 강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면서 사실상 이 조치가 정치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수출규제를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본 정부로서는 수출관리의 엄격화와 징용공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부연 설명했다.<sup>26)</sup>

© 2023년 3월, 아베 회고록

---

26) 安倍晋三; 橋本五郎; 尾山宏. 安倍晋三 回顧録 (p. 332). 中央公論新社. Kindle Edition.

▶ 아베신조 총리대신: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의 기반을 손상시킨 대응을 해온 셈입니다. 2018년 가을에, 일본 기업에 징용공(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시켜, 그 후에도 무엇인가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냐는 문제가 수출규제의 강화로 이어졌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 재료에 안전보장상의 염려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뢰관계가 있었다면, 조금 다른 대응을 취했겠지요. 정부로서는 수출관리의 엄격화는 징용공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만, 나는 나라와 나라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에 무역관리가 당연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두 개의 문제를 링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징용공 문제를 한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韓国は、日本との関係の基盤を損なう対応をしてきたわけです。2018年秋に、日本企業に元徴用工(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への賠償を命じる判決を確定させ、その後も何ら解決策を講じようとしていなかった。そうした文在寅政権に、どう対応していくかという問題が、輸出規制の強化につながりました。もちろん韓国の半導体材料に安全保障上の懸念があったのは事実です。でも、信頼関係があれば、もう少し違った対応を取ったでしょう。政府としては、輸出管理の厳格化と徴用工問題は「全く次元の異なる問題だ」という立場を取りました。ただ、私は「国と国との約束が守れない中において、貿易管理は当然だ」とも述べました。あえて二つの問題がリンクしているかのように示したのは、韓国に元徴用工の問題を深刻に受け止めてもらう

ためでした。)

▶ 인터뷰어: “한국 정부는 8월 22일 일본에 대한 대항조치로 한일 간 비밀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국은 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1월에 파기를 철회했습니다만, 이 한국의 GSOMIA 파기를 일본 측은 포함시켰습니까?”

▶ 아베신조 총리대신: 아니, 놀랐어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출 관리를 엄격화하는 일본의 조치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들은 단순히 감성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대항조치를 취한다면 보통은 좀 더 건설적인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 있어서도 한일 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관점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불신을 샀던 것입니다. 미국에게 한일은 모두 동아시아의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양국의 대립 격화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GSOMIA 지속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은 대단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엉망이 되면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게다가 미사일 발사 정보 등을 한일 간에 공유할 수 없게 되면 항상 미국을 통해 한일 간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미군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青山繁晴) 자민당 의원도 참의원에 출석하여, 수출규제는 외교문제 해법으로서 제시되었다는 진술을 했다. 그에 따르면,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 2019년 1월 30일, 자민당은 외교부회를 소집하여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단교,

대사 소환 등의 대책이 논의되었고, 본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당초 경산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sup>27)</sup>이었다. 그러나 이후 그가 아베 총리에게 직접 동 조치를 건의하고, 아베 총리가 총리관저 관계자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나서, 6개월 후에 관련 조치가 시행되었다고 한다.

◎ 2023년 5월 5일,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

▶ 아오야마 시게하루(青山繁晴) 의원: 그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죄송합니다, 불초 제가 4년 정도 전에 자유민주당 이야기입니다만, 외교부회에서 제안을 했고, 이것도 오늘은 이제 있는 그대로 되도록 이야기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미 시효도 지났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외교부회에서 발언한 후에 경제산업성에서 간부가 오셔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이트 국가에서 빼다니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과장 아니에요. 옆에 외무성의 돌아가신 와다 총무 과장도 계셨지만 한 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それを見直すべきだと、済みません、不肖私が四年ぐらい前に、自由民主党の話でありますけれども、外交部会で提案をいたしまして、これも今日はもうありのままになるべく話すつもりですから、もう時効も掛かっているだろうから申しますと、それを外交部会で発言した後に、経済産業省から幹部がお見えになって僕にどなられました。ホワイト国から外すなんて絶対できませんというふうに言われたんですよね。これ誇張じゃないです。横に外務省の亡くなった和田総務課長もいらっしゃいましたが、一言も発せられなかった。)

27)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당초 이 조치를 반대했던 경산성이 '외무성'의 검토의견에 입각하여 조치를 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2023년 3월 17일,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

▶ 아오야마 시게하루(青山繁晴) 의원: 서기 2019년 1월 30일의 자유민주당, 죄송합니다, 자유민주당 내부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만, 외교부회에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 전년 12월, 즉,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9년 1월 외교부회 전에 한국 해군이 우리 자위대 항공기에 대해 공격을 전제로 한 것 같은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제 개인적인 인상입니다만, 논의가 흥분되서, 개중에는 단교하자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사를 소환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西曆二〇一九年の一月三十日の自由民主党、済みません、自由民主党の内部の話を少しいたしますが、外交部会において大変荒れました。というのは、その前年の十二月、つまり、もう一回言いますけど、一九年の一月の外交部会の前に、韓国海軍が我が自衛隊の航空機に対して攻撃を前提にしたかのようなレーダー照射を行いました。それでかなり、まあ私の個人的印象ですけれども、議論が興奮して、中には断交と言われ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した。それから、多かったのは、大使を召還しろという意見でありました。)

▶ 아오야마 시게하루(青山繁晴) 의원: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나쁜 사람으로 전락할 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모더레이트한, 심지어 누가 봐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실 한국의 수출관리에 큰 문제가 두 가지 있었고 하나는 당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수출관리 자체가 부실하다고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반도의 뿌리 깊은 문제로, 예를 들어 일본의 제품

이 한국에 수출되었을 경우에 몰밑, 이면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의심이 있다고, 의심이 짙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私は反対です。そういうことを行っても国際社会では日本が悪者にされるだけですから、そうではなくて、モテレートな、しかも誰が見ても正当だと思ふことをあえてもう一度立ち返って考えるべきだと思ひまして、実は、韓国の輸出管理に大きな問題が二点あって、一つは、当時人数がとても少なくて輸出管理自体がずさんだと、日本だけじゃなくて世界中が心配しているという問題が一点ありました。もう一点、朝鮮半島の根深い問題として、例えば、日本の産品が韓国に輸出された場合に、水面下、裏のルートから北朝鮮に流れていると、疑いがあると、疑いが濃いという問題がありました。)

▶ 아오야마 시게하루(青山繁晴) 의원: 한편, 일본의 수출 관리는 그룹 A에서 그룹 D로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룹 D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북한입니다. 이것은 요점은 거의 수출해서는 안 된다에 가깝다는 취급입니다만, 반대로 그룹 A는, 이거, 이상한 일본어입니다만, 저는 죄송합니다, 글쓰는 것이기도 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화이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본어입니다만, 다만, 새하얗다면 아무 의문점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출할 때에 더 이상 체크는 최소한도, 하지 않는다고는 할수 없지만 최소한도로 해도 좋습니다라는 구조가 있고 거기에 한국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一方で、日本の輸出管理はグループAからグループDに分ける仕組みになっていまして、例えばグループDに入っているのがその北朝鮮です。これは要はほぼ輸出してはいけないに近いという扱いです。逆にグループAは、これ、変な日本語ですけど、私は、済みません、物書きで



もあるのでこれ認めたくないんですけど、ホワイト国、ホワイト議員という言い方があるかどうか知りませんが、ホワイト国というのは全く奇妙な日本語ですけども、ただ、その言っているのは、真っ白だと、何も疑問点はないんだと、何も問題はないから、日本から輸出するときにもうチェックは最小限度、しないとは言いませんけど、最小限度でいいですよという仕組みがあって、そこに韓国を入れているわけです。)

- ▶ 아오야마 시게하루(青山繁晴) 의원: 아까 말했듯이 북한에 일본의 산품이 흘러들어가서 예를 들면 핵개발에도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동포를 납치한 채로 있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화이트국에 두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일본은 어떤 나라라는 것을 민간 전문가 시절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98년, 아니, 그렇습니다, 1월 30일의 2019년, 98년이 아니에요, 갑자기 타임머신이 되었지만 2019년 1월 30일 외교부회의 마지막에 거수하여 발언한 것은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책상 밑에서 외무성 고위 관리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시고 등을 쪽 편 채로. 이걸 뭐 잘 알거든요. 이게 주관은 경제산업성이거든요. 외교에 관련되어 있지만 주관은 경제산업성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은 듣고 있어도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さっき言いましたとおり、北朝鮮に日本の産品が流れて例えば核開発にも使われるという懸念があり、日本にとっては当然、私たちの同胞を拉致したままであるという問題もありますから、これをホワイト国に置いているというのは一体日本は何という国だということを民間の専門家時代から考えておりましたから、この九八年、いや、そうです、一月三十日の、二〇一九年、九八年じゃないですよ、急にタイムマシンにな

りましたが、二〇一九年一月三十日の外交部会の最後に挙手して発言したのは、韓国をホワイト国から外してくださいと申し上げたんです。そうすると、さっき言いましたとおり、ありのままに言いますと、机の下で外務省の高官たちがこうやってスマホで検索をなさって、背筋は伸ばしたまま。これはまあよく分かるんですよ。これ、主管は経産省なんですよ。外交に関わるけれども主管は経産省なんで、恐らく名前は聞いていても詳しくは御存じなかったので、検索なさいました。)

- ▶ 아오야마 시게하루(青山繁晴) 의원: 그래서 그 외교부회의 발언 후에 외무성 총무과장과 그리고 경제산업성, 이거 이름은 물론 안 밝히지만 어떤 과장님이 오셔서 외무성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경제산업성의 어떤 과장님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다니 절대 안 된다고요. 지금 제가 좀 큰 목소리였는데 이런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요컨대 고향을 질렸던 거죠. 저는 소리를 듣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성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는 것은 상당한 일이 있다고. 그건 한일 관계의 뿌리 깊은 부분이거든요. 한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하면 중국과 함께 전쟁 책임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 견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외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고, 이것도 사실대로 말하지만, 아베 총리에게 전화해서 당시 총리입니다,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베 씨는 제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은 후, 그것을 총리 관저 안에 내려보내고, 그로부터 반년이 걸려, 2019년 7월 1일부터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제외 절차가 시작되었고, 하루, 이틀 만에 그것이 사실상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맞서서 8월에 일본에 대해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진짜 경위인 것이군요.

(それで、その外交部会での発言の後に、外務省の総務課長とそれか

ら経産省、これ名前はもちろん言いませんが、ある課長さんがおいでになりまして、外務省は一言も発しなかったけれども、経産省のある課長さんは、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外すなんて絶対できないんですと。今、僕、ちょっと大きな声でしたが、こんな声じゃないんですよ。要するに、どなったわけですよ。私は、どなられて興奮するんじゃないで、経産省がここまで言わなきゃいけないのはよっぽどのことがあると。それは、日韓関係の根深い部分なんです。韓国について問題点を指摘したりすると、中国と並んで戦争責任の問題が出てしまうというのが牢固としてありますから、むしろそのど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事情を理解しまして、これもありのままに言いますが、安倍総理にお電話いたしまして、当時総理です、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外すべきだということを申しました。安倍さんは私から詳しく話を聞かれた上で、それを総理官邸の中に下ろされて、そこから半年掛かって、二〇一九年の七月一日から韓国をホワイト国から除外除外手続が始まって、一日、二日でそれが事実上完了したわけです。で、韓国の方は対抗して八月に日本に対して輸出管理を厳しくしたりしましたけれども、これが本当の経緯なんですよ。(

아베 총리 회고록과 2019년 11월,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 출석한 아사노 의원의 발언, 10월 18일 아사히 신문 조간에 따르면, 일본이 전략 물자 수출규제를 하면서 우려했던 것은 두가지 였다. 첫째, 어떻게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조치를 할 것인가? 둘째,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에서 자유무역 확대선언을 할텐데, 이것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첫 번째 문제는 경상성 출신의 총리관저 보좌관(이마이, 하세가와)들이 풀었다고 전해진다. 두 사람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규제로 WTO 위반이 된 사례를 연구하여, 실제로 금수조치를 하지는 않고 수출통제 규정을 강화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아베 총리는 회고록에서 이러한 복안을 낸 두 사람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두 번째 문제는 2019년 6월 10일 관저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아시히 보도에 따르면, G20 이전에 발표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것을 우려해 수출규제 시행일을 G20 이후에 하는 것으로 정했다.

◎ 2023년 3월, 아베 회고록

- ▶ 인터뷰어: 수출관리의 엄격화를 발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아베신조 총리대신: 경제산업성입니다. 경제산업성 출신의 이마이 나오야 정무비서관과 하세가와 에이이치 총리 보좌관이 관련되었습니다. 일찍이 중국이, 하이브리드차의 모터 등에 필요한 희토류(희토류)의 수출 범위를 줄여, WTO의 룰을 위반한다고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조치는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할 뿐 수출 제한과는 다르기 때문에 WTO 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수법을 생각해 낸 이마이 씨나 하세가와 씨는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2019년 11월 8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 ▶ 아사노(浅野) 의원: 그래서 한 장 넘겨 주셔서 자료 3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만, 10월 18일 아사히 신문 조간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일 수출 관리에 관한 기사입니다. 제목이 매우 자극적입니다만, '극비 결정 공표는 G20 후, 참의원 선거 전'이라는 제목으로 상당히 상세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0일 오후

아베 총리의 관저 집무실에서 관련 협의가 열린 구체적인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단 쪽으로 눈을 돌려보니 이 회의가 열린 날 8일 후에는 G20 정상회의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총리는 의장으로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주창하는 선언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G20이 끝난 후에 이 수출관리에 관한 어떤 움직임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군요.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터무니없는 일이고, 다시 한번 경제산업성 내에서 이 수출관리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어떤 경위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사업이 결정되었는가. 이 부분, 제대로 경위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そこで、一枚めくっていただいて、資料三をごらん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も、十月十八日の朝日新聞の朝刊にこのような記事が載っておりました。これは日韓の輸出管理に関する記事でございます。見出しが大変刺激的なんですけれども、「極秘決定 公表はG20後、参院選前」というような見出しで、かなり詳細な記事が掲載をされてございます。例えば、六月二十日の午後に安倍総理の官邸執務室で関連する協議が開かれた、具体的な名前も出ております。そして、少し中段の方に目をやっていただきますと、この会議が行われた日の八日後にはG20サミットが迫っていたと。首相は、議長として自由貿易の重要性をうたった宣言をまとめ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であったということもあって、記事を読んでいただければわかるんですが、G20が終わった後にこの輸出管理に関する何らかの動きをしようとしたというような記事が載っているわけですね。これがもし事実としたらとんでもないことでして、改めて、経産省内でこの輸出管理に対してどのような議論がされて、どういった経

緯で韓国に対する輸出管理の事業が決まったのか。この部分、しっかり経緯を国民に対して説明をしていただく責任があると思いますので、その部分について経緯の説明を求めたいと思います。

#### 4.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영향은?

##### 4-1. 한국측 입장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2번에 걸쳐 소부장 경쟁력 강화 성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 7월 3일, 1주년 기념 성과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규제 이후 단 1건의 생산차질 없이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와 관련한 확실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일, 2주년 기념 성과 발표에서는 소부장 산업의 특정국 의존도 감소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본 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 2020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1년 성과 대국민 보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를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 신증설하였고,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 다변화에 성공했고, 美듀폰의 투자 유치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가 자체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수요기업과 시제품 테스트, 일부는 해외 수출 중임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100대 품목은 재고 수준을 기존보다 2~3배 확대하고 미국, 유럽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는 한편, ①해외투

자유치, ②대규모 설비투자, ③M&A 등 국내 공급기반 대폭 확충하였다. 28)

-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 대국민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불화수소는 대일 수입액이 1/6 수준('19.1~5월) 31.4% → ('21.1~5월) 24.9%)으로 감소하였으며,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UTG) 채택을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되는 등 특정국가 의존에서 탈피하였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의존도(HS코드 기준)가 31.4%에서 24.9%로 약 6.5%p 감소하였다. 소부장 산업 전체 대일의존도도 16.8%에서 15.9%로 감소 (△0.9%p)하였다. 29)

#### 4-2. 일본측 입장

수출규제로 인한 영향에 관한 일본측의 자료는 제한적이다. 경산성 당국자의 의회 출석 발언, 관련 기업인들의 언론 인터뷰, 해당 업계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서 일측의 인식을 일부 파악해 볼수 있다.

첫째, 경산성 당국자의 발언에 따르면, 3개 품목과 관련하여 일측은 수출규제 이후 불산의 대한국 수출액이 감소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대상과 수출입 통계상 분류의 차이로 인해 관련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불산 수출 감소 등에 따른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소부장의 산업 경쟁력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8)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29)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 2021년 5월 19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 마쓰다이(松平浩一) :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한국의 불화 수소 수입량, 이쪽을 보면 닛케이 신문의 자료 4를 준비해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것은 2019년 7월에 수입 운용을 바꾸고, 그해 12월에 수입 재개되었지만, 1919년 7월에 줄어든 채 역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망친 부분인데요. 한국의 수입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완한 것은 국내 소재 기업, 삼성의 관련 회사나 SK 머티리얼즈, 그런 회사가 양산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정말 대충 말하면 일본이 강했던 소재, 이것을 한국이 키우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군요. 이후 기사에서는 역시 한국 정부는 공급망 전체에서 일본 의존 탈피를 위해 폭넓은 소재와 제조 장치로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강했던 분야에서 경쟁 상대를 늘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 정책으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수출제한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まだ継続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韓国のフッ化水素の輸入量、こちらを見ると、日経新聞の、資料四を御用意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れども、まず、これは、二〇一九年七月に輸入の運用を変えて、その年の十二月に輸入再開されたけれども、一九年の七月に減ったままやはり回復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のようなんです。これは網かけした部分ですけれども。韓国の輸入は回復していない、じゃ、どうしているのかというと、補ったのは、韓国国内の素材企業、サムスンの関連会社とかSKマテリアルズ、そういった会社が量産を始め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つまり、もう本当に大ざっぱに言うと、日本が強かった素材、これを韓国が育てる



きっかけと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この後の記事では、やはり、韓国政府はサプライチェーン全体で日本依存脱却のために幅広い素材や製造装置で国産化を推進するというふうが続いていくんです。だから、結果的に、日本が強かった分野で競争相手を増やしてしまっているんです。だから、私は、産業政策としての観点からすると、この輸出制限というのは副作用が大き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 2023년 3월 17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 이가리 경산성 국장 : 지금의 플루오르화수소, 플루오르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의 세 품목에 대해서 무역 통계상 각각 직접 대응하는 통계 품목 번호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지만, 단, 일례로 무역 통계상 플루오르화수소에 대해서는 한국으로의 수출량, 이것이 2019년에 19,794톤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6,764톤입니다. 이 불화수소에 대해서도 외환법에서 규제되고 있는 대상과 세관 쪽에서 취하고 있는 통계 품목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례로 이런 숫자의 추이가 있었습니다. (今のフッ化水素、フッ化ポリイミド、レジストの三品目につきまして、貿易統計上、それぞれに直接対応する統計品目番号というものが設定されてございません。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て、個別にお答えするのは非常に難しいところではございますが、ただ、一例として、貿易統計上、フッ化水素につきまして、韓国向けの輸出量、これが、二〇一九年に一万九千七百九十四トンであったものが、二〇二二年には六千七百六十四トンになってございます。このフッ化水素につきましても、外為法で規制されている対象と税関の方で取っている統計品目が必ずしも同じ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が、一例としてこういう数字の推移がございました。)

▶ 니시무라 경산성 대신 : 이 세 품목에 대한 한국과의 무역 상황, 개별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니 확실히 일부 품목에서 한국으로의 수출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산화가 진행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국제 경쟁력에 대해서는 계속 높은 것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했듯이, 기술이나 인재의 유출이 국제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 염려하는 소리가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御指摘のように、この三品目についての韓国との貿易状況、個別の許可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せけれども、確認をしまして、確かに一部品目で韓国への輸出量が従前より減少しているものがございます。韓国で国産化が進んだものもありますが、全体として見れば、日本の国際競争力については引き続き高いものがあるという認識であります。ただ、御指摘のように、技術や人材の流出が国際競争力の低下を招いていると、この懸念する声があるのも十分承知をしております。)

둘째, 관련 기업들은 국회,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기업의 피해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점을 전달했다. 3개 품목 이외에도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다. 관광객 감소는 큐슈 등 일부 지역 문제로 치부되어 의회에서 비중있게 다루지지는 않았다.

◎ 2019년 11월 8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 아사노 의원 : 이번 한일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국민분들이 있는 한편, 예를 들어 이 개별 수출 허가제로 바뀐 품목을 제조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거래를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사업자와의 일상적인 신뢰 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정부 측에서 결정을 내리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사안 자체가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산업계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투명성 있게 진행해주셔야 산업계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지적드리고자 하오니 잘 부탁드립니다. (今回の日韓貿易の問題については、これを支持する国民の方々がいる一方で、例えば、この個別輸出許可制に切りかわった品目を製造されている方であったり、あるいは取引を御担当されている方々の立場からすれば、韓国に輸出している、韓国の事業者との日常的な信頼関係、そして自分たちの事業というのがある中で、こういったことが政府側から決定をされたことで御苦労されている方もいるやに思います。ですから、この個別事案そのものもいい、悪いというよりも、こういう産業界に影響を与える意思決定というのは極めて透明性高く進めていただかないと産業界の理解が得られないということをきょうは御指摘を申し上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どうぞよろしく申し上げます。)

◎ 2023년 3월 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 히라키 다이사쿠(平木大作) 의원: 아까도 잠깐 여쭙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재료인 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르화 폴리이미드, 그리고 플루오르화수소 이렇게 세 가지 품목이죠. 화이트 국가 지정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전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이거 나왔을 때부터, 저희 쪽으로도 상당히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이것으로 자신들의 사업이 망가지는 것이 아닐까 해서, 상당히 걱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이는 이른바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라 한국 측의 이 부적절한 사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 온 것입니다. (先ほども少し問いありましたが、具体的に言うと、半導体の材料でありますUV用のフォトレジスト、フッ化ポリイミド、そしてフッ化水素、この三品目ですね。ホワイト国指定から個別に規制を切り替えるというものでありましたけれども、これ出た当初から、私の元にも相当、作っている企業から、これで自分たちのビジネスが壊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大分心配だという声たくさんいただきました。当時、経済産業省は、これはいわゆる政治的な報復措置ではなくて、韓国側のこの不適切な事案になかなか改善が見られないためだということを書いてきたわけであります。)30)

◎ 2020년 11월, 다네이치 노리아키 도쿄오카공업 사장31)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국에서 국산화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에는 아직 일본과 같은 반도체 제조장이나 재료 분야의 강력한 생태계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낮고 있으면 뒤짚혀버립니다. 5년은 괜찮겠지만, 10년 후는 (어떻게 될지) 알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하며, 한국의 움직임에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경계심을 보였다.

셋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과의 교역 뿐만 아니라 대만, 미국 등 제3국과의 교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32) 특히, 일본 반도체 전문가 유노카미는 2021년 6월,

30) <https://kokkai.ndl.go.jp/txt/121113950X00320230309/146>

31) 도쿄오카공업은 포토레지스트(PR) 1등 기업이고, 특히,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EUV용 PR에는 독보적 (MS 46%)인 존재입니다. PR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와 함께 2019.7월, 일본이 수출규제한 3대 전략품목입니다.

32) 일본 JETRO가 낸 '반도체 서플라이체인 상류를 강화하는 대만'이라는 보고서(21.6.12)에서도 대만측 정보를 확인할수 있다. 보고서 내용 중 흥미로운 대목은, 대만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보고, 자국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와 유사한 반도체 소부장 자립화에 나섰다라는 내용이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3품목의 수출에 관해,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바꾼 것은 대만 당국에 조달 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을 일층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대만은) 일본이 수출하고 있는 재료 중 포토레지스트, 성막전구체, 웨이퍼기판재료 등 적어도 4종류에 대해서는 대만 메이커가 개발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자립화와 함께 대만의 외자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

중의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일본의 수출규제를 ‘제2의 진주만 공격’이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유노카미씨의 발언은 향후 공급망 관련 대책에 우리도 참고할만한 사항이 많아서 전문을 실는다.)

◎ 2021년 6월 1일, 중의원 과학기술이노베이션추진특별위원회 (湯之上 隆)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펜덱스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못하는 것을 할 바에야 그만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만, 그런 서투른 것의 대표적인 예가 2019년 7월 1일에 일어난 한국에 대한 반도체 3재료 수출 규제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재료 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도체 제조라는 것은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이퍼가 있고 거기를 세정하고 막을 쌓고 리소그래피로 패터닝하고 에칭하고 또 세정하고 검사하고. 2차원 웨이퍼 위에 3차원 구조물을 만들어 가는데 대략 이게 천 공정 정도 돼요. 천 칩이 동시에 형성되다.

이 세척이라는 게 총 천 공정이라고 하면 삼백 공정 정도 되는 거네요. 그중 백 공정 정도가 불화수소거든요. 불화수소 세척이라는 게 백 공정 정도 되거든요. 이 불화수소를 수출 규제해버렸어. 세 재료는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플루오르화수소인데, 이 플루오르화수소가 없으면 TV도 할 수 없고, 어떤 반도체도 이것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버트로 하는 것이 좋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전부 임팩트가 있다는 것이군요.

6월 30일까지 오사카에서 G7 정상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베 전 총

---

일본, 유럽의 소부장이 대만에 모이고 있다는 동향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요약해보면, "대만 행정원은 2030년까지 대만 남부에 반도체특구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일본 바루카, 독일 메르크, 미국 인테그리스가 올해 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리가 세계 무역, 안정되고 사이 좋게 손잡고 글로벌하게 지내던 다음 날 한국에 대해 이것을 했군요. 이것은 온 나라가 큰 소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의 진주만 공격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에 불화수소 재고가 떨어지면 하나도 못 만들게 된 참이거든요.

이로써 진절머리가 나서 한국 업체들은 모두 일본의 병목현상을 밝혀내고 일본이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재료, 장치, 부품, 전부 내제화를 지향하라는 식으로 키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불화수소 메이커에게는 큰 민폐, 다른 메이커도 큰 민폐입니다.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됐다며 쫓겨나는 거예요. 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얘기가 빗나갔는데 이런 정책을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TSMC가 R&D 센터를 츠쿠바에 만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억측이에요, 억측입니다만, 이 제2의 진주만 공격이 행해졌을 때 TSMC라든지 미국 반도체의 제 지인이 일본 정부라는 것은 화가 나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설마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지 않겠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TSMC에 열심히 경제산업성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이것을 발길질로 해 버리면 설마 하지만 이걸 하지 않겠구나 하는 경계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보드 미팅에서 백팔십육억엔 계상해서 R&D 센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해외에서 일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뭔가 화나게 하면 이런 걸 하면.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湯之上参考人 何をやるべきかは、非常に重要です。

アペンディックスの資料を示させていただきます。

下手なことをやるぐらいならやめてくれというのが僕の意見なんですけ

れども、そんな下手なことの代表例が、二〇一九年七月一日に起きた韓国への半導体三材料の輸出規制です。これによって、日本の材料メーカーは大きな被害を被りました。

半導体の製造というのは、大体こんなふうになっています。ウェハーがあって、そこを洗浄して、膜を積んで、リソグラフィでパターンニングして、エッチングして、また洗浄して、検査してと。二次元のウェハー上に三次元の構造物を作っていくんですけども、大体これが千工程ぐらいになります。千チップが同時形成される。

この洗浄というのが、全部で千工程だとすると、三百工程ぐらいあるんですね。そのうちの百工程ぐらいがフッ化水素なんですよ。フッ化水素の洗浄というのは百工程ぐらいあるんですよ。このフッ化水素を輸出規制しちゃった。

三材料は、フッ化ポリイミド、EUVレジスト、フッ化水素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フッ化水素がないと、テレビもできませんし、どんな半導体も、これは丸じゃなくてバツにした方がよかったのかと思うんですけども、全部にインパクト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

六月三十日まで大阪でG7のサミットをやっていたんですよ。安倍前総理大臣が、世界の貿易、安定して、仲よく手を取り合ってグローバルにとやっていた翌日に、韓国に対してこれをやったんですね。これは韓国中が大騒動になりました。これは第二の真珠湾攻撃と言われています。韓国のサムスンとハイニックスにフッ化水素の在庫がなくなったら、一個も作れなくなったところなんです。

これで懲りて、韓国メーカーは、全て日本のボトルネックを洗い出せ、日本がボトルネックになっている材料、装置、部品、全部内製化を目指せというふうにかじを切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れは、日本のフッ化水素

メーカーにとっては大迷惑、ほかのメーカーも大迷惑なんです。シェアがどんどん下がっていくんです。成功したところから、日本はもういいと締め出されていくんです。ということが起きました。

ちょっと話がそれた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政策をやめてほしいんですよ。

今、TSMCがR&Dセンターをつくばに造るなどということを行っています。僕の臆測ですよ、臆測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第二の真珠湾攻撃が行われたときに、TSMCとかアメリカの半導体の僕の知人が、日本政府というのは怒るとこういうことをするのか、まさかと思うが俺たちにもしないよな、そう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TSMCに、一生懸命、経産省が口説いているわけですね。これを足蹴にしてしまうと、まさかと思うけれどもこれはやらないよなというような警戒感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やむなくボードミーティングで百八十六億円計上して、R&Dセンターを造るかもしれないよというような決定をしたんですけども、海外から日本というのはこういうふうに見られているんですよ、何か怒らせるとこういうことをやると。だから、是非こういうことはやめ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よ。<sup>33)</sup>

## 5. 종합정리

첫째, 이 분쟁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의 활용,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을 살펴봐야 한다.

둘째, 총 4년의 기간 중 분쟁기는 1년, 휴전기는 2년 9개월, 복원기는 3

---

33) <https://kokkai.ndl.go.jp/txt/120403910X00420210601/58>



개월을 차지한다. 이 분쟁은 강렬했으나, 양국 간 충돌은 짧았으며, 소멸 역시 매우 빨랐다. 이 조치가 경제적, 행정적인 조치론 넘어선 영역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동 조치는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일본내에서도 관련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아베 총리 등 당시 의사결정 참여자들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아베 총리 사후에 관련 회고록이 발표되고, 일본의회에서 관련 진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일부 확인 가능해졌다. 이번 조사가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넷째, 규제에 인한 영향에 대해 양국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국은 3개 품목의 자립화가 상당 부분 진전되고 이외에도 핵심품목들의 대일본 의존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대체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섯째, 수출규제 결정 과정과 이후에 일본내에서도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산업성의 실무레벨에서는 강한 반대의견이 있었고, 조치 이후에는 일본 업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민원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일본내 반대여론이 원복기에 일본이 신속하게 관련 조치를 원상회복시키게 만든 원동력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섯째, 민간에서는 이 분쟁이 양국간 문제를 넘어 제3국과의 교역에까지 영향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정부가 수출입의 증감 등 단기적인 통계에 집중한 반면, 전문가들은 신뢰 등 계량화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무형의 자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있었다.

이번 조사는 동 분쟁을 처음으로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고, 시계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종합한 최초의 시도이다. 또한, 국내 뿐만 아니라 상대측인 일측의 원자료를 수집해서 보다 균형잡힌 시각에 분쟁을 분석해볼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원자료 조사라는 특성상 주제별 심층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1. 정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이며,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말한다. 편의상 소재·부품·장비를 소부장으로 부른다. (이하 소재·부품·장비는 소부장으로 표기한다.)

### 2. 현황

2023년 4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에 따르면, 2020년 소부장 산업의 생산액은 847조원이며, 제조업 전체 생산액, 1,503조원의 56%를 차지한다. 2020년 부가가치액은 322조원이며,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액 555조원의 58%에 이른다.

2022년 소부장 수출액은 3,737억불, 수입액은 2,639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6,836억불의 55%, 수입액 7,314억불의 36%에 해당한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가 478억불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소부장 산업은 1,098억불 흑자를 시현했다. 2022년 기준,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28%, 미국 14%, 베트남 13%, 대만 5%, 일본 4% 등이다.

소부장 기업은 2020년 29,614개이며, 종업원 수는 142만 7천명이다. 기

업 수와 종업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기업 수는 2010년 26,806개에서 2015년 29,098개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29,614개를 기록하였다. 종업원 수는 2010년 128만 9천명이었으며, 2015년 144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142만 7천명으로 소폭 줄었다.

### 3. 문제점

#### 가. 기술수준

소부장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고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화학 공정소재 88.4, 나노 86.6, 세라믹 85.6, 금속재료 84.6, 탄소소재 83.1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1년 우리나라의 글로벌 특허 출원건수가 27,413건, 글로벌 특허비율은 39%로 일본(164,411건, 62%)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 나. 생산역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 격차가 크다. 2020년 기준,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소부장 기업은 전체의 약 2%인 612개이다. 이 기업들의 소부장 생산액은 463조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종업원 수 300명 이하 소부장 기업은 29,002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생산액은 383조원에 그쳤다.

#### 다. 수입 의존도

일본, 미국, 독일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낮아진데 반해, 중국, 대만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높아졌다. 소부장 전체 수입액에서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18.3%에서 15%, 미국은 11.8%에서 10%, 독일은 5%에서 4.1%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에 중국은 28.3%에서 29.9%, 대만은 6.8%에서 9.5%로 높아졌다.

#### 라. 수출 경쟁력

소부장 수출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 증가율은 둔화하였다. 소부장 수출액은 2012년 2,849억불에서 2022년 3,737억불로, 31.1%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5,479억불에서 6,836억불로, 24.8% 증가하였다. 연평균 소부장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2~2014년, 0.9%에서 2015~2017년, 6.2%로 크게 성장하였다가 2018~2022년에는 1.6% 증가에 그쳤다.

#### 마.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의 전 세계 소부장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2년 이후 6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UNComtrade data(HS 6단위 기준)에 따르면,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은 중국 16.2%, 독일 9.0%, 미국 8.1%, 홍콩 5.5%, 일본 5.2%에 이어 한국은 4.3%를 기록하였다.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부장 품목은 94개다. 2019년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품목은 일본이

283개, 미국이 123개, 독일 73개, 중국 등이 94개이다.

세계시장에서 두 국가가 수출하는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경합도를 살펴보면,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심화되고 있다. 기계산업진흥회의 분석에 따르면, 대중국 소부장 수출 경합도는 2010년 59.8%에서 2021년 65.2%로 상승하였다. 부품분야의 경합도 상승이 두드러졌다. 소재분야 경합도는 58.1%에서 63.5%로 증가한 반면, 부품 분야는 61.7%에서 67.3%로 대폭 늘어났다.

※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산업성, 일본의회의사록 등)

※ 일본어는 기계번역 후 필자가 초벌 번역한 것임 (상세내용은 원문을 필히 참조할 것)